

2020년 행정사 제8회 (2020.5.16.)

해설 : 이승철

01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 ②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③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 ④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 ⑤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해설

- ① (×) 행정의 수행은 정치권력과 공권력을 배경으로 정부에 의해 이뤄지지만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준정부기관, 민간기관과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

■ 행정의 특징

- ① 가치추구와 공익지향성 : 행정은 공공문제의 해결과 공공욕구의 충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증대를 추구.
- ② 공공서비스 생산·공급·분배와 관련된 활동 : 행정은 공공서비스 생산·공급·분배와 관련된 활동으로 정책의 형성·집행, 행정기관의 내부관리,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관리 등을 포함.
- ③ 다양한 부문과의 상호작용 및 협력 관계 형성 : 행정의 수행은 정치권력과 공권력을 배경으로 정부에 의해 이뤄지지만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준정부기관, 민간기관과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
- ④ 정치과정과의 밀접한 연관성(정치성) : 행정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전제로 하여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짐.

답 ③

02 리그스(F. W. Riggs)의 프리즘적 모형(Prismat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다.
- ②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를 말한다.
- ③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은 형식주의, 정실주의, 이질혼합성을 들 수 있다.
-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설명된다.
- ⑤ 농업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모형을 사랑방 모형(Sala Model)이라 한다.

해설

- ⑤ (×) 리그스의 사회3원론에 따르면 농업사회는 융합사회로서 안방(Chamber)모형, 프리즘적 사회(과도기 사회)는 분광사회로서 사랑방(Sala)모형이다.
- 리그스(F. Riggs) 사회3원론(1960년) : 사회2원론은 발전도상의 과도기 사회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여 3원론으로 수정

구 분	융합사회	프리즘적 사회(分光·굴절 사회)	분광사회
단선적 진화론	농업사회(Agraria) ⇨	전이·과도기 사회(Transitia) ⇨	산업사회(Industria)
기능(문화)의 과정	융합적(Fused), 미분화	프리즘적(Prismatic), 부분화	분화적(Diffracted or refracted)
구조 / 역할	전통적 / 미발전	과도적 / 발전도상	현대적 / 발전적
관료제	Chamber(안방) 모형	Sala(사랑방) 모형	Office(관청·사무실) 모형
행정수행자	자유사상가(Literatus)	소수의 창조적 선각자(Intelligentsia)	지성인(Intellectual)

답 ⑤

03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은?

2020 행정사

- 관료의 사익추구 ○ 예산극대화 ○ 지대추구행위 ○ 정치 및 행정현상의 경제학적 분석

- ① 체제이론
- ② 거버넌스이론
- ③ 신행정학이론
- ④ 공공선택이론
- ⑤ 포스트모더니즘이론

해설

공공선택이론과 관련된다.

- ① 관료의 사익추구 :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관료, 시민, 정치인)은 서로 다른 선호와 이기심을 가진 자기이익지향적 인간(이기적 인간)이고, 대안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합리적 경제인(rational economic man)이며, 자기선택에 비취 최고의 순이익을 가져올 대안을 선택하는 극대화전략(자기효용극대화)을 채택한다고 가정. 관료도 더 이상 윤리적 판단자가 아니라 다른 시민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함.
- ② 니스칸넨(W. Niskanen)의 관료이익(예산)극대화 가설(budget maximization) : 관료가 산출하는 업무량이 많을수록 관료는 의회로부터 많은 예산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공공재의 산출량을 생산 가능한 최대수준까지 생산하게 되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한 공공재를 산출하게 되는 낭비적 결과가 발생.
- ③ 정부규제와 지대추구(Rent-Seeking)활동 : 정부규제를 통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집단은 그 기대이익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집단 역시 이 한도 내에서 로비활동으로써 정부에 자원을 투입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두 집단이 투입한 전체비용은 이전하고자 했던 이득보다 더 커질 수도 있음.

- ㉔ "비시장적 의사결정(non-market decision-making)의 경제학적 연구 또는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것"
- 연구대상 : 비시장적 분야인 정치·행정 분야 ㉔ 정부관료제, 투표, 정당제도, 의회, 이익집단 등
 - 방법론 :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사용, 정치과정에 시장경제적 대안을 도입

답 ④

0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 ②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 ③ 옴부즈만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 ④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 ⑤ 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

해설

- ㉔ (×) 옴부즈만과 유사한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처리제도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법원에 관한 사항이거나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원에 이송하거나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결과 시정의 권고나 의견표명, 제도개선의 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지만 시정조치를 직접할 수 없으며 취소를 결정할 수도 없다(직접적 통제권은 없고 간접적 통제권만 지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법원에 관한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답 ⑤

05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0 행정사

- | | | |
|----------------------|--------------|------------|
| ㉠ 불완전한 경쟁 | ㉡ 비용과 수입의 절연 | ㉢ 정보의 불충분성 |
| ㉣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 ㉤ 파생적 외부효과 | ㉥ 외부효과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시장실패 요인 : ㉠㉢㉥ / 정부실패 요인 : ㉡㉣㉤. * ㉢ 정보의 불충분성은 시장실패 요인이면서 정부실패 요인이다.

■ 시장실패 원인과 정부실패 원인

시장실패 원인	정부실패 원인
① 불완전경쟁(독과점)	① 행정조직의 내부성(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사적 목표의 설정) - 예산극대화, 정보 획득과 통제에 집착, 최신기술에의 집착, 관료집단의 이익추구
② 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와 자연독점	② 철의삼각, 포획, 지대추구
② 불완전정보(정보의 불확실성)	③ 정보의 비대칭성(주인-대리인이론, 정보 편재)
정보의 비대칭성(주인-대리인이론, 정보 편재)	④ 파생적 외부효과
③ 공공재의 존재(비배제성,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	⑤ 편익과 비용의 절연(미시적 절연, 거시적 절연)
공유재(공유지의 비극)	⑥ 비용과 수익의 괴리·절연
④ 외부효과(외부경제, 외부비경제)	⑦ 권력의 편재(권력과 특혜에 따른 가치분배의 불평등)
⑤ 소득분배의 불공평(빈익빈부익부)	⑧ 정부서비스 공급의 독점성에 따른 X-비효율성
⑥ 경기불안정(실업·inflation·국제수지불균형)	⑨ 정치인의 높은 시간할인율, 정치적 보상체계의 왜곡
	⑩ 생산기술의 불명확성, 종결메커니즘의 부재

답 ①

06 정책의 기능과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정책은 정치적·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을 거친다.
- ②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역할을 한다.
- ③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의 이익을 조정·통합하기도 한다.
- ④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⑤ 국경일 제정, 국기는 국민적 통합을 위하여 정치적인·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정책의 예이다.

해설

- ① (×) 정책과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치적·행정적 과정으로서 복잡하고 동태적인 성격을 지닌다.
- ③ (○) 예) 산업정책·물가정책 ⇨ 안정, 4차산업혁명정책 ⇨ 변동, 노사관계 관련정책 ⇨ 이익 조정·통합
- ④ (○) 경쟁적 규제정책은 보호적 규제정책과 배분정책이 혼합된 혼합정책(Hybrid Policy)의 성격을 지닌다. 즉, 피규제자에게 부대이익을 제공해주며, 동시에 각종 규제장치를 통해 공익증진을 꾀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므로, 경쟁의 승리자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특정한 행위를 반드시 이행할 의무도 진다.

답 ①

07 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로 옳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국민에 의한 통제
- ②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
- ⑤ 입법부에 의한 통제

해설

- 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기관으로서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 공식적 통제에 해당한다.

답 ④

08 전자정부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 ②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만을 변화시킨다.
- ③ 정보정책은 행정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처리 재설계와는 관계가 없다.
- ④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전반을 혁신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무보다는 이론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 ⑤ 전자정부는 행정부문에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초점을 두기보다 정보기술 그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해설

- ① (○)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G4C).
- ② (×) 전자정부란 효율적인 Back Office(후방행정 : 후선 지원업무, 프런트오피스를 지원하는 행정조직 내부 측면)와 투명한 Front Office(전방행정 : 조직과 시민이 맞닿는 대시민관계 측면)를 구축하여 이를 긴밀히 연계시키는 것임. 능률성 모형 + 민주성 모형.
- ③ (×) **업무처리절차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과 같은 조직의 핵심적인 성과요인들의 획기적인(Dramatic) 향상을 위하여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Process)를 근본적으로(Fundamental) 검토하여 공급자 위주의 업무처리 방식을 수요자(고객) 위주로 기본에서부터 혁신적으로(Radical) 재설계하는 기법. **정보기술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지원. 정보는 처음 발생할 때 한번만 처리하고 전 과정을 통해 그 정보를 활용하도록 설계.**
- ④ (×) 실무와 이론 모두 강조됨
- ⑤ (×)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행정부문에 정보기술을 도입·활용할 수 있어야 함.

답 ①

09 로위(T. Lowi)의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0 행정사

- ㉠ 분배정책 ㉡ 규제정책 ㉢ 보호적 규제정책 ㉣ 자율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해설

Lowi는 1964년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1972년에는 여기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였다.

■ 학자별 정책유형 비교

로위(Lowi)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앨먼드(Almond)와 파월(Powell)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솔리스버리(Salisbury)	분배정책	규제정책, 자율규제정책	재분배정책	
프로호크(Frohock)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본축적정책, 윤리정책

답 ②

10 조직목표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전환되는 것이 목표의 대치 또는 전환이다.
- ②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본래의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교체하는 것이 목표의 승계이다.
- ③ 동종 목표의 수 또는 이종목표가 늘어나는 것이 목표의 추가이다.
- ④ 동종 또는 이종 목표의 수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목표의 축소이다.
- ⑤ 미헬스(R. Michels)의 과두제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은 목표의 추가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해설

- ① (○) 목표의 전환(displacement; 왜곡·대치·전도·전치·도치) : 목표가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표가 되는 현상, 목표와 수단 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 중국적 가치를 수단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 조직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망각·왜곡하여 그것을 수단으로 격하시키거나, 수단을 오히려 목표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것.
- ② (○) 목표의 승계(succession) :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 불가능한 경우 실현가능한 새로운 목표를 찾아 설정하는 것. 목표 승계는 수평적으로 목표가 바뀌는 것인 반면, 목표 전환은 상위목표와 하위목표가 수직적으로 바뀜.
- ③④ (○) • 목표의 확대(expansion) : 동일[동종] 목표의 범위가 넓어짐
• 목표의 추가(multiplication) : 새로운 목표의 추가 - 동종 목표의 수(가짓수) 증가 또는 이종 목표 추가
• 목표의 축소(reduction) : 동종 또는 이종목표의 수나 범위가 줄어듦.
- ⑤ (×) (R. Michels)의 과두제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은 목표의 전환(displacement)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 미헬스(R. 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 최고관리자, 소수간부가 일단 권력을 장악한 후 조직의 본래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권력과 지위의 유지·강화를 위해 목표를 전환시킴.

답 ⑤

11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규에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
- ② 권한과 책임이 명백한 계층제 구조로 이루어진다.
- ③ 관료는 임무수행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한다.
- ④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관료로 채용된다.
- ⑤ 임무수행은 인격성(personality)과 비합리성이 중시된다.

해설

- ⑤ (×) 임무수행은 비정역성(impersonality; 물인격성, 물개인성)과 합리성이 중시된다.
• 비정역성(非情誼性; impersonality - 비사인성·물개인성·물주관성·비개인성), 공·사(公·私) 구별 : 관료들은 공식적 업무수행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나 기호의 영향을 받거나 주어지는 안 됨(영혼이 없는 관료). 비정역성은 권력자의 인격적 지배를 방지하며 개인의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여 합리적·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절차적 정의를 가능하게 함.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되어 사적인 감정은 공식 업무 수행에 연결시키지 않으므로 공과 사가 구분되지 못하던 전통적인 가산관료제와는 다름.

답 ⑤

12 허즈버그(F. Herzberg)가 제시한 위생요인이 아닌 것은?

2020 행정사

- ① 인정감 ② 봉급 ③ 대인관계 ④ 근무조건 ⑤ 조직정책

해설

- ① 인정감은 만족요인(동기요인)이며, 신분안정(직업적 안정)은 불만요인(위생요인)이다.

허즈버그의 불만요인과 만족요인

불만요인(dissatisfier) = 위생요인(hygiene)	만족요인(satisfier) = 동기요인(motivator)
• 불만유발 또는 불만해소에 작용 •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 관계 없음(필요조건에 불과). • 불만요인 개선시 불만 없는 상태가 됨. • 불만요인 개선시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음.	• 만족 또는 직무수행 동기유발에 작용 • 생산성 향상과 직접 관련됨(충분조건). • 만족요인 불충족시 만족 없는 상태가 됨. • 만족요인 불충족시 불만으로 연결되지 않음.
• 환경·직무수행상황 vs 조직구성원 • 직무 외적이고 물리적·환경적인 요인	• 직무 자체 vs 조직구성원 • 직무 내재적·심리적 요인(내적 보상·자아실현)
조직의 정책과 관리·관행·규칙, 감독(리더십의 질), 근무환경·작업조건, 근무시간, 정년, 지위나 직위, 신분안정(직업적 안정), 복지시설, 보수, 대인관계(상사·동료·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	직무상 성취감(자아실현)·인정감, 직무자체·직무내용(보람 있는 일), 성장·발전,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 승진, 자아개발, 직무성과, 책임의 증대, 칭찬

답 ①

13 우리나라 공무원 분류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복수 정답)

2020 행정사

- ① 국회의원 ②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③ 대통령 비서실장
④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⑤ 감사원 사무차장

해설

①③④는 모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②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 ⑤ 감사원 사무차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이다.
종래 별정직이던 감사원 사무차장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2015.2.3.)
• 감사원법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①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사무차장은 일반직으로 한다.

답 ②⑤

14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② 조직, 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이 책임운영기관장이 아닌 주무 부처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다.
⑤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불가능하다.

해설

- ① (×)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부터 설치
②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인 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특허청 하나만 지정되어 있다.
④ (×)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행안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 동법 제4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 동법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①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⑤ (×) • 동법 제20조(기관 간 인사교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답 ③

15 우리나라 공무원 시보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이다.
③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될 수 있다.
⑤ 시보기간 중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설

- ② (×) 시보임용 기간 : 5급 공무원 신규 채용시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 신규 채용시 6개월

•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답 ②

16

공무원 A는 주5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나 그가 맡은 업무는 정형적이면서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집에서 일할 수 없고 반드시 주5일 출근을 해야만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탄력근무 방식으로 묶인 것은?

2020 행정사

-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 시차출퇴근제 ㉢ 원격근무제
㉣ 재량근무제 ㉤ 근무시간선택제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조건 : 정형적·보안유지·재택근무불가 / 주5일 근무 / 대중교통 접촉 최소화 시간대 출퇴근

㉠ (×)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가 비정형적 업무에 적합하다고 해설하시는 분도 있으나 모든 업무에 가능하며 인사혁신처 예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도 가능한 업무 예시로 다음 내용을 들고 있다.

-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 적용가능 업무(예시)
 - 창구 및 유선 민원처리 등 정형화된 업무 - 24시간 근무부서의 업무(예 : 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 각종 교육기관 강의 업무(예 : 시간선택제 교사, 강사 등)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는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 ~ 35시간 근무한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질문 내용이 가장 적합한 '탄력근무 방식'이며 탄력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flex-time work), 근무시간선택제(alternative work schedule), 집약근무형(compressed work), 재량근무형(discretionary work)이 있다.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나 원격근무제는 탄력근무방식이 아니므로 답이 될 수 없다.

- ㉡ (○)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시간조절이 가능하므로 제시된 조건에 적합.
㉢ (×) 주5일 출근해야 하므로 원격근무제 불가. 또한 원격근무제는 탄력근무제에 속하지도 않는다.
㉣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므로 재량근무제 불가.
㉤ (○) 근무시간선택제는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일 4~12시간 근무하되 주5일 근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제시된 조건에 적합

답 ⑤

※ 유연근무제(변형근무제)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83호(2020.01.20.)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일과 삶의 균형 : work-life balance)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근무시간·근무장소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근무 형태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part-time work)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 ~ 35시간 근무) • 실시기간 :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지정(최대사용기간 제한은 없음) • 적용범위 : 모든 공무원은 직종(정무직은 제외)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등에 제한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가능 • 신청시기 : 수시로 가능 • 보수 및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		
	탄력근무제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 자율 조정.		
근무 시간	시차출퇴근제(flex-time work)	1일 8시간 근무	출근시간 자율 조정(매일 같은 출근시간 또는 요일별 다른 출근 시간)*주1)	
	근무시간선택제(alternative work schedule)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일 4~12시간 근무	1주 5일 근무 준수*주2)	
	집약근무형(compressed work)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일 4~12시간 근무*주3)	1주 3.5 ~ 4일 근무	
	재량근무형(discretionary work)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근무 인정.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		
근무 장소	원격근무제	고정된 근무장소에서 벗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근무		
	재택근무형 (at-home work)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으며 정액지급분은 지급 가능		
	스마트워크 근무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나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 주1) 시차출퇴근제는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도록 함이 원칙

* 주2) 근무시간선택제는 업무협조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해 이 시간에는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이 원칙

* 주3) 집약근무형 1일 근무시간은 종전 '1일 10~12시간'에서 '1일 4~12시간'으로 변경됨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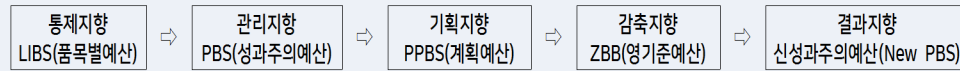
예산제도의 등장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20 행정사

- ㉠ 영기준예산 ㉡ 품목별예산 ㉢ 결과지향예산 ㉣ 계획예산(PPBS) ㉤ 성과주의예산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해설



답 ③

18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재정관리혁신 조치의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 ② 2000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용되었다.
- ③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 ④ 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 분석에 집중한다.
- ⑤ 이 제도 도입 이전인 1994년부터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려는 총사업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해설

- ① (○)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담당 부처의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개략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② (○)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에 도입되어 2000년 예산편성 때부터 적용
- ③ (○)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36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 ⑤ (○)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고지원으로 시행되는 대규모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답 ④

19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2010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실제 시행되었다.
- ② 예산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집행을 추구한다.
-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결과(성인지예산서 작성)와 과정(예산의 성별 영향 분석과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 ⑤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배분의 변화를 추구한다.

해설

- ②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이다
- ③ (○)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 성인지예산은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이 아닌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관점에서 대두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정책에서 성 주류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구의 하나로서 도입되었다. 성 주류화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던 여성에게 초점을 두기보다 양성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정부 정책에 젠더관점을 통합하려는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제시되었다. 성 주류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을 탐색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즉, 성 주류화란 양성평등의 관점이 모든 정책의 내용·수준·단계에 통합되도록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개선 및 발전시키며, 또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성 주류화 개념을 적용하고 모든 정부예산이 성인지 관점에서 재구조화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해된다

답 ②

20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후에 한 팀원들이 티타임에 나눈 대화이다. 다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화자들의 주민등록지를 고려할 때, 대화내용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재와 맞지 않는 사람은? 2020 행정사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A, D | ○ 서울특별시 관악구 : B |
| ○ 성남시 분당구 : C | ○ 대전광역시 유성구 : E |

- ① A : “제가 투표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과 동급 자치계층 시장이라고 우쭐대더군요.”
- ② B : “제 고향 제주시에 사시는 부모님은 원하시는 후보들이 제주시의원과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네요. 제가 보기에도 역량 있는 지역일꾼들로 고향 발전이 기대됩니다.”
- ③ C : “분당구는 웬만한 시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구의원 선거투표하러니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제정신 차려서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 후보들 중 제대로 된 인물에 투표했습니다.”

- ④ D : “제 고향은 기장군입니다. 그곳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기장군의원과 부산시의원이 잘 선출되어 제 고향 발전도 기대됩니다.”
- ⑤ E :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데 시의원은 내가 투표한 분이, 구의원은 내가 투표하지 않은 분이 당선되었어요.”

해설

- ① (○) 자치계층은 광역기초 2계층이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로 1계층이다. 서울특별시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계층에서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과 세종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지위는 같다.
- ②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제주시는 행정시로서 지방행정기관이다. 따라서 도의원 선거는 있지만 제주시 의원선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③ (○) 분당구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 설치할 수 있는 일반구(행정구, 자치구가 아닌 구)이다.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분당구 지방의회는 없으며 분당구 주민은 성남시 의원과 경기도 의원 선거권을 갖는다.
- ④ (○) 기장군은 광역시에 존재하는 군이다 기장군 주민은 기초의회 의원인 군의회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인 부산시의회 의원 선거권을 갖는다.
- ⑤ (○) 유성구는 광역시에 두는 자치구이다. 유성구 주민은 기초의회 의원인 자치구의회의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인 대전시의회 의원 선거권을 갖는다.

답 ②

21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된다는 원칙은?

2020 행정사

- ① 딜론(Dillon)의 원칙 ② 법률유보의 원칙 ③ 충분재정의 원칙
- ④ 보충성의 원칙 ⑤ 포괄성의 원칙

해설

- **보충성 원칙** : 정부 간 사무배분시 지역주민으로부터 지리·공간적으로 가까운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 상위정부(상급자치단체,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며, 업무처리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인 사회구성단위의 활동을 파괴·박탈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 ① **딜런의 법칙(Dillon's Rule)** : 1868년 아이오와(Iowa)주 대법관 딜런이 제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상 분리를 통한 주정부의 독립성, 지방정부에 대한 주정부의 법적 우위를 주장(㉠ 지방자치권은 보통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만 행사, ㉡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이며 주정부의 법에 의해 창설·폐지됨, ㉢ 지방정부는 주의회의 의지에 종속된 권한의 차용자(tenants)에 불과함)
- ② **법률유보의 원칙**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 ③ **충분재정원칙(충분성 원칙)** : 지방세의 원칙으로 지방재정수요의 충족에 필요한 충분한 수입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
- ⑤ **포괄성 원칙** :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

답 ④

22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아닌 것은?

2020 행정사

- ① 종합부동산세 ② 담배소비세 ③ 재산세 ④ 취득세 ⑤ 레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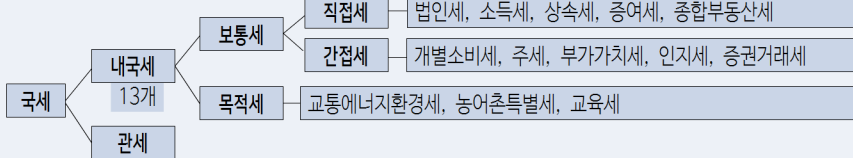
해설

- 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지방세의 유형

	과세주체	보통세(9개)		목적세(2개)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광역자치단체	도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기초자치단체	시·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국세의 유형



답 ①

23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정부는 시민을 위해 정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②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③ 정부의 기능을 민간화하고 지출을 팽창시켜야 한다.
- ④ 공공관리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해야 한다.
- ⑤ 정부서비스 공급의 관리는 산출·성과지향적이어야 한다.

해설

- ③ (×) 지출을 팽창 ⇨ 지출을 감소

답 ③

24 행정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 ②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 ③ 행정에 대한 연구대상의 선택이나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 ④ 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 ⑤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해설

- ④ (×) 행정개념은 시대에 따라 행정기능이 변화하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설명되어 왔다. [예] 공공사무의 관리(행정관리론) ⇨ 통치기능-정책결정과 정책집행(통치기능설) ⇨ 협동적 집단적 의사결정(행태론)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신행정론·발행행정론) ⇨ 행정 대신 거버넌스 개념 등장(신공공관리·신국정관리)

답 ④

25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구조적 접근방법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활용한다.
- ② 과정적 접근방법이 관심을 갖는 개혁대상은 분권화의 수준개선과 조직의 기능이다.
- ③ 과정적 접근방법은 바람직한 문화변동을 추진한다.
- ④ 구조적 접근방법이 갖는 관심은 통솔범위의 조정, 권한배분의 개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⑤ 통합적 접근방법은 폐쇄체제에 입각하여 개혁대상을 포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해설

- ① (×) 구조적 접근 공식적 조직의 내부구조를 개선·합리화하는 방법이다. 인간행태적 접근방법이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가치관 등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② (×) 분권화의 수준 개선과 조직의 기능을 개혁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조적 접근방법이다. 과정적 접근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업무처리 절차나 운영기술, 일의 흐름 개선에 초점을 둠
 ③ (×) 문화론적 접근방법 :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 의식적·계획적인 개입에 의해 바람직한 문화변동을 달성하는 것.
 ⑤ (×) 통합적 접근방법 : 개방체제 관념에 입각하여 개혁대상의 구성요소를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여러 가지 분화된 접근법을 통합하여 해결방안을 탐색하려는 접근 방법.

답 ④

✳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구조적 (제도적) 접근방법	공식적·합리적 조직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접근(예) 원리전략, 분권화전략 등), 공식적 조직의 내부구조를 개선·합리화. * Hoover위원회의 활동,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① 구조·직제 간소화, 기능중복 제거 ② 명령계통·통솔범위 조정 등 조직원리 적용 ③ 행정사무의 적절 배분, 권한·책임 명확화, 책임의 재규정 ④ 집권화 또는 분권화의 확대 ⑤ 의사전달[의사소통] 체제의 개선 ⑥ 의사결정권한의 수정 ⑦ 조직의 통·폐합,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 관련이론 : 고전적 조직론, 원리접근법, Weber의 관료제론 ■ 원리전략(최적 구조의 설계) : 최적의 구조가 업무의 최적 수행을 가져온다는 전략. 기능중복 제거, 책임 재규정, 조정·통제절차 개선,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등 ■ 분권화 전략 : 조직이 분권화되면 계층이 줄고 명령과 책임 계통이 분명해져 막료서비스가 확립될 수 있음. 공식조직뿐 아니라 관리자의 행태와 의사결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을 지님. • 단점 ① 개도국에서는 구조와 현실적인 기능과의 불일치(형식주의)가 심하여 적용 곤란. ② 조직의 내부 구조만 중시하여 인간적·행태적 요인이나 조직단위 간 권력관계 등을 과소평가. ③ 조직의 동태적 성격과 환경적 요인 경시.
관리 기술적 (과정적 절차적) 접근방법	행정과정에서 사용하는 행정기술·장비·수단 개선, 계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행정체제의 과정, 업무처리 절차나 운영기술, 일의 흐름 개선 ① 업무·기술·절차·장비의 전문화·기계화·표준화 ② OR(관리과학·운영연구)·SA(체계분석), 행정전산화(OA, EDPS), 정보시스템(PMIS) 등 과학기술 활용 ③ 직무분석·직무평가, 문서양식 개선, 사무관리, 정원관리, 봉급책정 ④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 BPR), 행정민원절차의 간소화	• 관련이론 : 과학적 관리론, 관리과학, 체계분석, 계량화모형 • 장점 : 업무수행의 능률성 제고와 성과향상, 기술적 쇄신을 통해 표준적 절차와 조직의 과업수행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조직행태와 인간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점 ① 계량적 기계모형으로 현실세계를 너무 단순화시켜 파악, 기술과 인간성 간의 갈등을 경시. ② 구성원의 기술활용능력 부족시 적용 곤란. ③ 신생국은 기술적 접근을 활용할 여건과 전문인력이 부족.

2020년 행정사 제8회

인간· 행태적 접근방법	• 행정인의 가치관·신념·태도를 인위적으로 조작적 전략이나 실험실 훈련 등에 의하여 변형시켜 행정체제 전체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접근방법 • 상황적·자발적 성격 ① 중요 의사결정에의 참여 ② 감수성훈련, 과정상담, MBO 등 조직발전(OD)기법 ③ 조직역학(group dynamics)	• 관련이론 : 인간관계론, 행태주의, 행태과학 • 장점 :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효과 • 단점 ① 장기간 시간 소요(행태변동은 단기간에 곤란), 법적 제약. ②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토의 수용이 어려운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서 는 곤란. ③ 비공식적 감정적 측면에 치중하므로, 공식적 계층제적 성격이 강한 정부조직에 전면적 적용 곤란.
통합적 종합적 접근법	통합적·총체적 개선(구조 + 기술 + 행태). 개방체제 관념에 입각하여 개혁대상의 구성요소를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여러 가지 분화된 접근법을 통합하여 해결방안을 탐색하려는 접근 방법.	• 전체적 상호관련성을 중시하는 체제이론·상황이론을 주요 기반으로 함 • 단점 : 개혁추진자들의 실천적 작업에 많은 부담을 줌
사업중심 접근방법	산출/정책 중심적 접근. 행정산출의 정책목표와 내용, 소요자원에 초점을 두어 행정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법. 정책분석과 평가, 생산성 측정, 직무감사, 행정책임평가 등이 주요 도구.	
문화론적 접근방법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하려는 접근방법. 의식적·계획적인 개입에 의해 바람직한 문화변동을 달성하는 것.	